

북한 '변화론' 쟁점 분석: 대남 혁명 전략과 경제 관리 방식

진희관 / 평화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 사회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가장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 '변화론' 과 '불변론' 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은 전개되지 못한 채 공허한 대립의 양상을 띠어왔다. 특히, 두 가지 논점 즉,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북한의 자본주의 방식(또는 개인주의화) 도입에 대한 논쟁은 북한 변화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은 90년대에 이르러 '폐기' 되어 '실리 확보 전략'으로 변질된 상태에 있다. 북한의 1980년 당 규약과 1985년 주체사상 총서의 혁명 이론을 근거로 대남혁명론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문헌 상에 나타나듯이 '대남 혁명 전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이미 80년대로 마감하였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느슨한 연방제 제안 등은 공존 전략으로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대남 혁명을 단행할 경제력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한반도의 혼란을 야기할 경우 주변 국가의 지원을 얻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제 북한체제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 중심의 경제 관리 방식은 점차 근로자 중심 그리고 개인 중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가 붕괴되어가고 있다. 즉, 개인의 소상품 경리가 장마당을 통해 부활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집단주의 원칙의 경제 관리 방식의 중대한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북한 변화의 폭과 속도는 체제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에너지·식량난에 처한 북한의 체제 생존 방식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를 인정하듯이 북한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북한의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인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머리말: 북한 변화 논쟁의 '공허성'

O 리 사회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가장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 '변화론' 과 '불변론' 이라는 대립된 논점이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20여 개월 동안 북한이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 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북한의 긍정적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왔다. 즉,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과연 북한의 변화를 얘기할 때 그 '변화'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변화에 대한 수준이 같지 않을 경우 논쟁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며, 답이 나오지 않는 비효율적인 토론으로 흐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북한 변화 논쟁은 약속한 수준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북한 일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그 예로 제시하는 경제 관료에 대한 자본주의 교육, 일부 시장 경제의 도입(개인 소유 인정, 통행의 자유 허용 등), 남북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 금강산 개방 등 몇가지 사례에서 볼

때,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서는 "과연 북한이 무슨 변화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 역시 북한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단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일 뿐,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전술상의 변화'이지 '전략 상의 변화'는 아니라는 언급이다. 다시 말하면, 반대 의견측은 아무리 대북 포용 정책을 전개하더라도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대남 혁명 전략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정부가 언급하는 북한의 변화 유도 또는 변화 조짐의 증거들 역시 매우 취약하며, 반대 논거 역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변화 근거와 그렇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북한 변화 논쟁의 '공허성'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문헌 상의 변화를 재정리하고, 정치적·경제적 현실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처한 현실에 보다 접근하도록 하였다.

대남 정책의 변화 검증

90년대, '대남 혁명 전략' 유보

북한 대남 전략의 기초가 '남조선 혁명론'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3대혁명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내적 환경,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 대남 전략 기초가 만들어진 시기는 이미 60년대로서 당시의 대내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¹⁾ 이러한 규정이 확인되는 것은 지난 1980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마지막이다.²⁾

이후 20여 년 동안 당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으며, 대남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³⁾을 통해 그나마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헌법」에서는 (제5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헌법」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을 삭제하고 있다. “북반부에서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 통일·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제9조)고 되어 있다. 물론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혁명 의도가 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남조선혁명론은 북한 사회의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의 조국통일 이론⁴⁾으로 승계되었으며, 이 이론은 여전히 ‘고려민주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재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혁명 논리는 6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이때의 내용이 여전히 대남 혁명 논리의 기초로서 문헌과 규정 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록되어 있는 조국통일 이론에 대해서는 문헌적 규정과 당 규약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남혁명론이 바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대남 전

1)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기초인 ‘3대혁명역량강화’는 1964년 2월 27일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조국 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 1980년 10월 13일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규정의 전문에서도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토통일원(1988),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제IV집)」, p. 133).

3) 1992년 개정 헌법과 1998년 개정 헌법을 말한다.

4)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 주체사상총서 5권, 서울: 태백, 1989, pp. 302~303.

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겠는가 또는 변동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과 당 규약을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이다. 주체사상은 소위 '영원한 수령'이라고 호칭되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을 통해 이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요컨대, 북한 사회를 규정하는 주요 문건인 주체사상·당 규약·헌법에서 볼 때, 가장 최근에 개정된 헌법(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열린 당대회의 규약과 1985년에 '집대성'된 주체사상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과 '남조선 혁명'이라는 용어가 남아있다. 그러나 20여 년간 당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80년의 당 규약을 근거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정리한 1985년의 주체사상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여전히 대남혁명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데도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된 과거의 규정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즉,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기해야 한다(또는 당 규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북한은 갑작스런 붕괴가 닥치지 않는 한 실질적이든 명분적이든간에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포기할 수 없는 '정체' (identity)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한 북한은 당 규약을 변경할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설령 당 규약은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조선로동당 7차당대회에서 헌법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이념이자 '김일성의 혁명 사상'인 주체사상 내용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북한 주체사상의 대남 혁명 전략의 내용을 수정해야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이는 북한체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남북 관계는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으며, 영원히 평행선을 긋게 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평화 공존

그렇다면 대안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스스로가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을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면,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 대남 혁명 전략이라는 오래된 규정이 주체사상과 당 규약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면서 동시에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전략의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91년에 채택되고 이듬해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이며 북한이 이를 이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북한의 변화' (대남 전략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의 체제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남북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장에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제1조), 파괴·전복 행위 금지(제4조), 그리고 제2장에서는 무력 불사용과 무력 침략 포기(제9조), 불가침 이행과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제12조)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파괴와 전복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대남 혁명 논리를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한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주체사상과 당 규약에 남아있는 대남 혁명 논리는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내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요

한 의무이며, 우리 국민에게 요구되는 자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북한 '변화론'과 '변화불가피론'은 막연한 변화의 개념을 벗어나서 보다 구체적인 북한 변화의 지점을 공유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우선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은 '변화론'이라기 보다는 '변화불가피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사회의 변화(자본주의 시장으로의 편입 및 개방 등)는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변화불가피론'은 '대남 혁명 전략 변화불가피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변화불가피론'과 '대남 혁명 전략 변화불가피론'의 입장은 막연히 대립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대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대립'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 논쟁할 수 있도록 '변화'의 수위(level)를 동등하게 가져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변화불가피론의 논리는 '대남 전략(혁명 전략)의 불변'이라는 핵심적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살펴보았듯이 논리적으로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몇가지 사안들을 근거로 불변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삼수정 침투·서해교전·미그기 도입 등의 무력적 방식을 그 근거로 설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대남 혁명론과 직결시키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 요컨대, '변화론'과 '변화불가론'의 입장에 대한 상호간의 근거를 되묻는 작업은 양측 입장의 폭을 줄여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남 전략의 변화'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최소한 '변화'에 대한 수준의 일치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측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과 반대측의 "전략의 변화는 없다"는 두 가지의 상호 엇갈리는 논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변화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다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일례로,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과로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정부측의 입장은 반대측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기능만을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대측은 북한의 전략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변화 지점들을 발견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 관리 방식의 변화

북한의 변화 및 불변에 대한 논란은 대남 혁명론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구체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 관리 운영 방식·생활 방식 등의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능성 논의는 아직 쟁점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경제 관리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 이론과 역가설

주체사상이 말하는 경제 관리 이론의 본질적 내용은 ①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실질적인 생산 성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경제 조직 사업', ②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기 위한 정치 사업'에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관리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당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역할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북한의 지도 이념이자 소위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칭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경제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

5)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7, 서울: 태백, 1988, pp. 188~193.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92년에 출간된 「주체의 경제관리리론」⁶⁾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인민 대중 중심의 경제 관리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지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기본 원칙 네 가지⁷⁾는 정치적 지도의 중요성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1996년 김일성 사망 이후 출간된 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 - 경제학 3」(이하 「사상리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본질은 첫째, 인민 대중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 관리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지휘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⁸⁾ 즉, 인민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관리 운영해야 하며, 근로 인민 대중이 경제 관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상리론」의 특징적인 것은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비해 미숙성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공산

주의의 높은 단계와는 달리 그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는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띠고 경영 활동을 하며,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 그리고 상품 화폐 관계와 가치 법칙을 경제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⁹⁾ 이러한 몇가지 점들이 절대화할 경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위험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심각히 염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경제 관리 방식의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역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특징은 당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당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이완될 경우 사회주의 경제 관리는 약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의 관리 방식은 개별 및 개인 경영 방식이 사라지고 전일적인 관리 방식만이 존재해야 하며, 이것이 북한 경제 관리 방식의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개인주의적 성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 방식이 등장한다면, 이는 북한이 지향하는 공산주의 목표에 역행하는 방식이 된다.

6) 사회과학출판사(1992),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평양.

7)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은 ① 정치적 지도와 경제적 지도의 옹은 결합, ②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의 옹은 결합, ③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의 옹은 결합, ④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옹은 결합을 말한다.

8) 사회과학출판사(199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 - 경제학 3」, 평양, pp. 6~20.

9) 위의 책, p. 32.

셋째, 사회주의 경제 관리 방식은 인민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의견이더라도 반영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관리 방식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인민 대중 중심이라는 것이 당 중심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북한의 경제 관리 이론은 '인민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자기 법칙성을 띠고 있다.

중간 간부의 부패와 당·국가의 통일적 지도 이완

당과 국가의 대중 통제 및 지도 기능의 약화는 중앙과 하부 단위 그리고 간부 및 인민 대중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사회주의 국가의 위계 질서는 관료들의 그들의 상급자에 대한 의존 관계, 당·국가 기구 내에서 하부 단위의 중앙에 대한 의존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져왔다. 관료들의 생활 수준은 이른바 노멘클라투라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가령 봉급, 이동 수단, 주택 조건, 소비 패턴 등은 서열과 밀접히 관련되어왔다.

그러나 중앙 관리 경제의 약화와 제2경제의 진전 과정은 간부층의 생활 양태를 변화

시켜가고 있다. 즉, 간부층의 경우 상부로부터의 자원 배분 기능이 저하되는 가운데, 공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 경제 활동 등 각종 제2경제 활동으로 인해 비공식적 수입원이 창출됨에 따라, 상부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반 주민에 대한 제재나 감시 활동을 할 만한 인센티브도 약화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간부층은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가진 공적 지위가 중요하며 상급자 혹은 상부의 목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의존 관계가 일방적으로 약화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수입 원천의 방향에 따라 하부 지향적으로 변화해가고 있고 상부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 이탈 주민 오명선에 의하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민 대중들의 과외의 경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간 간부에게 뇌물 제공이 불가피하며, 실제로 그는 중간 간부에게 석탄 등을 제공하거나 목표량의 자재를 사다줌으로써 두 달 가량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은 바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탈북자들 역시 90년대 이후 뇌주기식이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적 사회 통제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생활 총화'는 중간 간부에 대한 뇌물 제공을 통해 해결하거나 또는 형식적으

10) 정세진(1999), "북한체제 변화의 정치 경제: '계획경제' 약화에 따른 지배 구조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11권 2호 참조.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1997년을 전후해서 부정 부패에 대한 공개 처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공개 처형을 목격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를 위한 당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 수준은 경제난 심화와 반비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적 경제의 확산과 통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 붕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국가의 경제 관리의 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 경리 활동을 소생시키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은 개인주의 경영을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양해야 할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농민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활동, 외화벌이 및 식량 구입 등을 위한 직장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8년에는 이를 제도화하는 헌법을 수정하여 개인 소유의 확대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배경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식량배급제 붕괴의 후광이다. 한국전쟁 이후 유지해온 북한의 독특한 관리제도 가운데 하나가 식량배급제도이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은 배급제의 붕괴를 가져왔고, 인민 대중들은 이 제도의 틀 내에서는 더 이상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것은 식량을 얻기 위한 개인적 행동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했다.

둘째, 소비품생산체계의 파괴와 임금제의 유명무실화에 있다. 에너지난에 따른 공장 가동률¹²⁾의 급격한 저하는 소비품의 생산체계를 붕괴시켰고, 공적 배급체계에 의존하던 소비품의 유통을 사적 영역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이에 상품의 가격은 임금과 괴리되는 현상을 불러왔다.¹³⁾ 즉, 임금제의 틀 내에서는 더 이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결과, 과거 해방 이후 지속되었던 소상품 경리가 해체되면서 1958년 8월에 완성

11) 청남제지공장 기사를 지낸 심신복은 1995년 이후 2 건의 공개 처형을 목격했으며, 경비대 군의관 출신 석영환은 1998년 4월 사회안전선 간부 13 명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12) 공장 가동률이 20~25%대에 이르고 있다는 추정은 있으나(임강택(1999. 9),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하고 있는가 - 대외 무역 정책", 「통일경제」)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책 연구 기관의 비공식 평가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이는 전쟁 당시의 파괴에 의한 가동률 저하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계의 노후화 및 부품 밀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13) 현재 북한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인 70 원 가량으로 농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약 쌀 2 kg이거나 돼지고기 한 근 그리고 담배 두 갑 정도의 가치를 넘지 못하고 있다.

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가 40 년만에 붕괴의 길을 걷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4차당대회의 사업 총화 보고에서 당시 김일성 수상은 두 가지의 변화를 놓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나는 '농업 협동화'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붕괴된 것인가? 적어도 북한이 주장해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는 커다란 흠집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 협동화의 공동 소유·공동 생산·분배 방식 역시 90년대에 이르러 점진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으며, 농업분조제와 텃밭·땀기밭 등으로 점차 분자화 및 개인화 경향을 띠면서 본래의 농업 관리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물론 1998년의 헌법 수정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며,¹⁴⁾ 1999년 초에 발표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경제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증거라는 분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인민경제계획법」은 불가피한 사적 경제의 확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

의 최소한의 노력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경제 관리 방식 또는 경제운영체제로는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국가 경영 방식의 대안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체제 유지의 심각성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헌법의 수정 및 사적 경제 공간의 확충 등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 정치'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1997년 전후하여 나타난 처형의 경우가 '공포 정치'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최근 탈북자들에 의하면 이 또한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여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즉, '공포 정치'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변화'이다.

14) 박정동(1999. 9),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고 있는가 - 외자 유치 정책", 「통일경제」, 참조. 박정동은 1998년 수정 헌법 제 24조에서 텃밭 경리외에 기타 합법적인 경리 활동의 수입도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문헌에 개인 소득에 대한 소유권 인정 범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권태진((1999. 9),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고 있는가 - 농업 정책", 「통일경제」)은 북한의 농업 정책이 점차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박순성((1999), "북한 경제 이론과 경제체제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11권 1호, p. 201)은 1998년 헌법 개정이 체제 원리를 수정하려는 의도인 적극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계획 경제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유명무실화된 식량배급제도와 임금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만이 고갈된 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다. 이는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남 정책의 혁명 논리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90년대 들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1991년 신년사를 통해 느슨한 연방 형태를 제안하면서 남북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 대남혁명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 역시 한반도에서의 혼란을 원치 않는 현실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은 위기에 처한 북한 사회의 결속을 위한 방안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

요컨대, 북한 변화의 폭과 속도는 체제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에너지·식량난에 처한 북한의 체제 생존 방식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를 인정하듯이 북한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북한의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인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변화 논쟁이 보다 구체화되어가는 것은 남북 관계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 전개를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 변화 논쟁’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논리로 인해 대북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변화 논쟁의 발전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남 대화와 국민 화합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97**